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4일 (요일 5월 11일) 화요일

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5개월 만에 재개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37년 만에 확인되면서 5·18 사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 1번지' 전일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전일빌딩은 그동안 정밀 안전진단과 총탄 흔적조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리모델링 작업이 중단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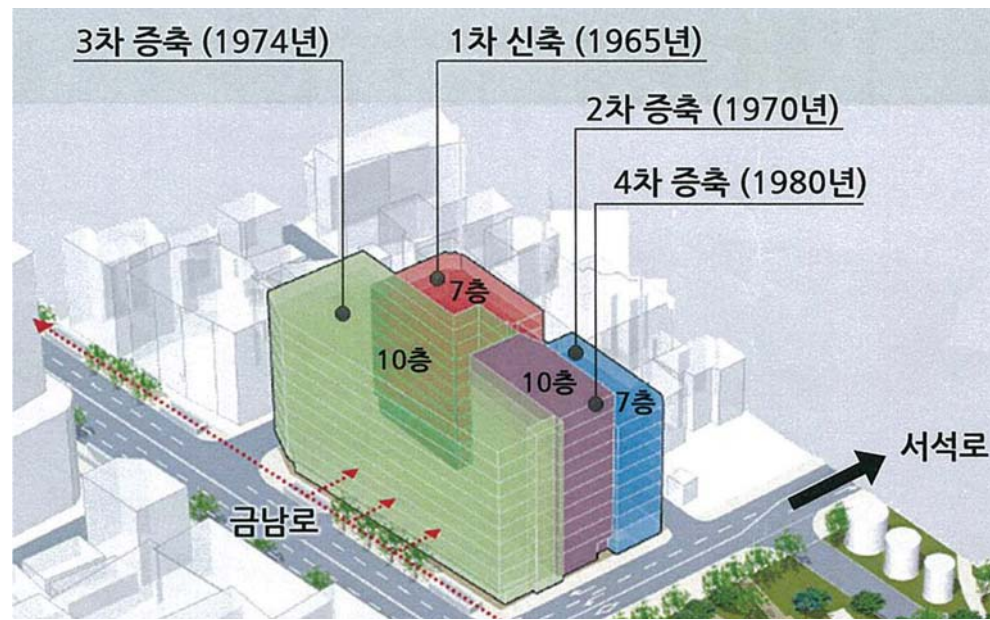
리모델링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일부분을 철거한 뒤 기계식 주차장을 짓고,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국비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중단됐던 전일빌딩 실시설계 작업이 이번 주 안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수립된 기본계획도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전일빌딩은 198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시는 전일빌딩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지원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130억원, 시비 290억원 등 모두 4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당초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철거 대신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 지원화 시설로 조성하기로 하고 전망형 엘리베이터와 최상층 스

탄흔 조사·정밀 안전진단 등으로 수개월째 중단 1차 증축분 철거 후 주차장 조성...국비 증액 관전



카이워크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헬기 탄흔이 무더기 발견되고 건물 안전성이 도파위에 오르면서 관련 절차는 울스뚱했다. 이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불과 기틀

기, 침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조사도 마무리되면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한 리모델링이 재개되게 됐다.

안전진단비 400만원 외에 배관 통신, 전기, 승강기 등 증설 공비용을 위한 보수·보강비 90억원도 1차 추경에 반영됐다.

시와 공사는 원형 보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140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물내 가장 노후화된 1차 증축분을 철거한 뒤 해당 공간에 기계식 주차장을 지을 방침이다. 2차 증축분 철거도 일부 논의됐으나 벽면에서 일부 탄흔이 발견돼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2차 증축분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또 헬기 사격을 비롯, 5·18 진실 규명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인 국비가 일정 정도 상향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까다로운 경제성(B/C) 분석 대상이 되는 만큼 현재의 총사업비 수준에서 국비와 시비 비율만 조정하면 하는 것이 시의 바람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소명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며 "관련 협의와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말까지는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후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없어서 버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부 언론은 박수의 배석자를 인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예방한 이혜훈 비서관을 새 대표에게 같이 앉혔다고 보도했다. 이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잘 했으면 중추를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났다. 다 없애버렸다"며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박 전 대통령 시절 기업인들이 사수연을 많이 했다. 재벌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 기업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이후 연세경쟁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에게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권력 기반을 동원한 조사가 진행돼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인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기후 온난화' 전남 보리 파종 적기 안 맞다... "시기별 수확량 큰 차이"

전국 최대 주산지 전남 "파종 적기 11월 상순~ 11월 중순"



전남농업기술원 지난 2016~2017년 낙안면 농가포장에서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9개 품종을 파종 시기를 달리해 시험재배를 실시했다.

전국의 최대 보리류 주산지인 전남지역이 기후온난화에 따라 보리 파종시기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국 보리 재배면적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은 기후 온난화에 따라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파종 적기 등 재배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순천시 낙안면의 맥주보리 재배 농가에서는 매년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 지난 2016~2017년 낙안면 농가포장에서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9개 품종을 파종 시기를 달리해 시험재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맥주보리(3품종)의 경우 10월 25일에 파종한 수확량은 10a당 169kg, 11월 5일 파종 때는 10a당 296kg, 11월 15일은 10a당 339 kg이었다.

쌀보리(2품종)의 경우도 10월 25일 파종 시 수확량이 10a당 110kg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11월 5일 파종은 10a당 226kg, 11월 15일에는 10a당 301kg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겨울 보리류의 파종기~생육 초기(2016년 10월 중순~2017년 1월 상순)의 기온이 평년 10.1℃보다 1.6℃ 높았는

데, 지난해 12월 5일 파종한 맥주보리(3품종)와 쌀보리(2품종)의 수확량은 10a당 각각 360kg, 414kg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시기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없어 가장 수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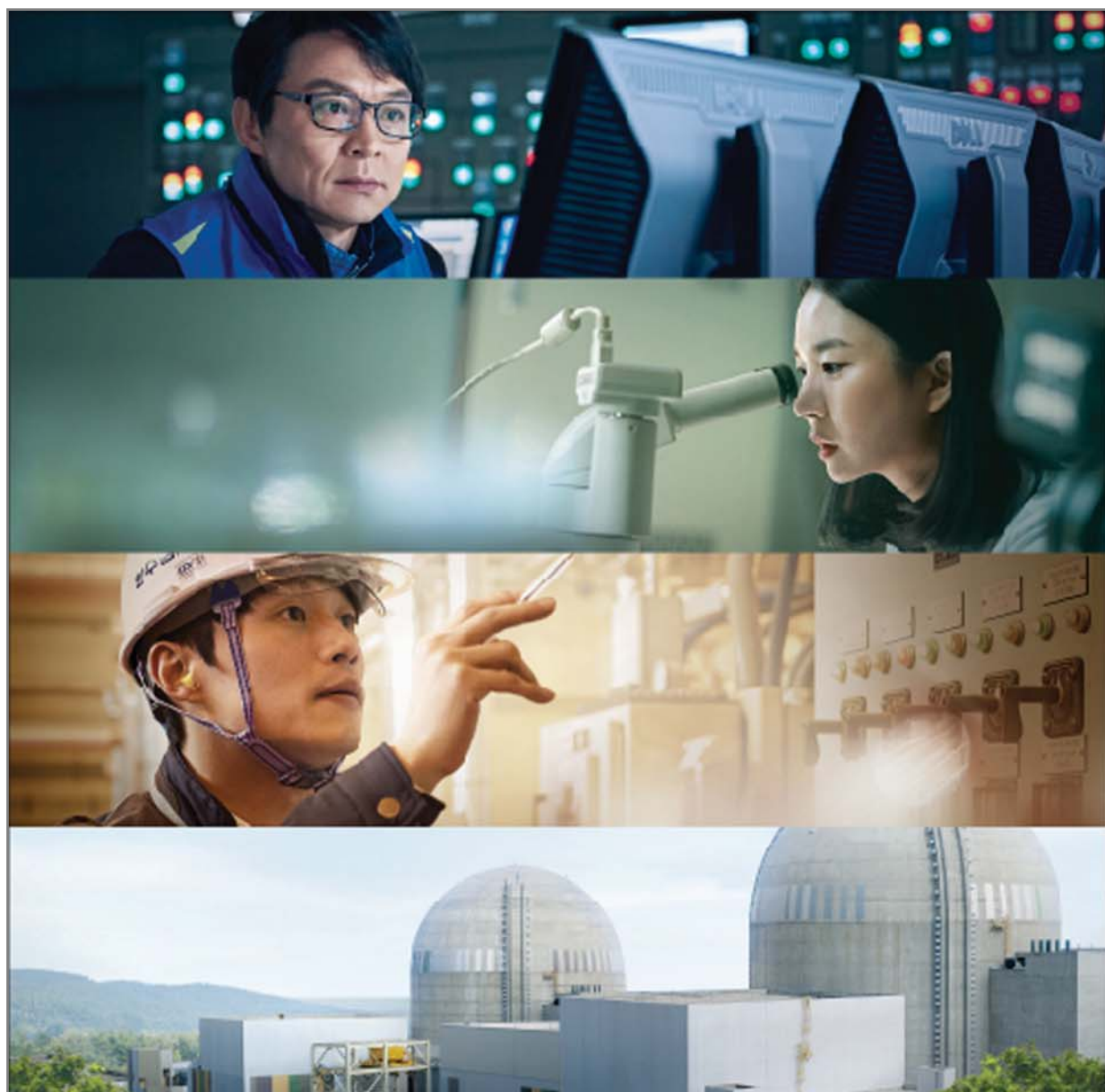
이는 그동안 전남의 안전한 보리류 파종 적기로 보고 있는 10월 25일~11월 5일을 뒤집는 결과다.

전남농업기술원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은 보리류 파종 적기를 기존 시기에서, 11월 상순~11월 중순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남농기원 최진경연구사는 "이번 결과는 남부지역에서 맥류 파종기를 11월 중순으로 변경할 때 수량이 증대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